

도 “도민 건강·복지 향상에 최선”

복지·보건 분야 주요 현안 브리핑… 결핵 예방 검진 확대·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청 황철호 복지여성 보건국장이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감염병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결핵 예방 및 검진 강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건강검진과에서 추진하는 암 예방! 검진을 항상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전용 상담 공간 마련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소개됐다.

▲결핵 예방 검진 확대… 외국인 관리 강화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하며, 14개 시·군과 함께 결핵 예방 홍보 및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고령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검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결핵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북도 내 결핵 환자는 78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522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노인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도 무료 지원한다.

외국인 결핵 예방도 강화된다. 현재 전북도 내 체류 외국인은 약 4만 890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질병관리청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력해 결핵 예방 교육, 통역 지원, 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최

대 90만원 지급

전북자치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한다.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도내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선착순 123명을 지원하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암 예방 캠페인… 전국 최상위 검진율 성과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자치도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내 암 검진 수검률은 42.88%로 전국 광역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암 사망률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21일 열리는 암 예방 기념식에서 김경희 출산지원팀장이 대통령상을, 전주시 김가연 주무관·익산시 최지혜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남원시는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는다.

도는 "앞으로도 암 예방 수칙 홍보와 검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상담 공간 마련…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전북자치도는 도청 1층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상담 공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3층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새 공간을 마련해 보다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상담 공간은 단순한 상담실을 넘어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과 생산품을 전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도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서예, 그림, 사진 등 예술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도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중 동그라미 플러스 육포선물세트와 떡메마를 생산 떡(눈꽃

혼합세트, 눈꽃설화세트)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쇠고기 육포, 한돈 육포, 김과 김자반 자른 미역 등을 CU도점점에 입점시켜 3월 18일부터 판매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도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핵 예방 강화, 남성 육아휴직 지원, 암 예방 사업 확대, 장애인 상담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장애인을 위해 민원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보다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우대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평화롭게 살고 싶다'… 도의회 천막농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남이 의원이 18일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남이 의원이 18일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치테러대책위 “나경원, 정치테러 조장 말라”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험 자작극으로 몰아… 금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8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나 의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험을 자작극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선동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정치테러를 규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나 의원의 발언은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측은 “이 대표는 지난해 홍기 테러를 당한 피해자이며, 최근에도 암살 위험 제보가 접수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중집회를 자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테러 위협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음모론 확산과 허위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나경원 의원의 공개 사과 △정치테러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 중단 △유사 발언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나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치인을 향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극단주의 폭력과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최정호 더민주익산혁신회의 대표, 병원에 긴급이송

‘윤석열 즉각 파면’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김용만)는 18일 오후 최정호 익산혁신회의 대표가 단식중 건강 악화로 익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최정호 익산공동상임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오다가 18일 오후 1시경 혈압이 50mmhg로 낮아지고 장 기능이 악화되는 등 급격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여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익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호 더민주익산혁신회의 대표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1년 9개월간



재입원하다가 지난 12월 31일자로 사직직을 사직하고 익산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본부, 민·관 합동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8일 도내 노후, 대형 위험물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위험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으로, 매월 노후 위험물시설을 방문해 분야별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도내 위험물 제조소는 총 6,132개소에 달하며, 이번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은 지난해 화재가 발생하여 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익산시에 위치한 (주)LG화학생명과학익산공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해당 시설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물 취급자의 건강·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병행했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민 체감 특례 발굴 ‘가속도’

2025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킷오프 회의 열고 신규 발굴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 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으로… 법 제정 필요

안호영 국회 한노위원장 등 공동주관 토론회 개최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 기후위기적응포럼이 공동주관한 '기후 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 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



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 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위원회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선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위원회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루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친환경농업 성장 위한 제도 개선·예산 확대 시급

민주 윤준병·송옥주·김정호 의원, 친환경농업협회와 간담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삼기 회장은 "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은 지



역이 속출하고 있고,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 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공립은 외국인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음=김대환 기자